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3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 .9. 10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윤건영 · 김한규
김남근 · 김남희 · 황정아
송재봉 · 양부남 · 이광희
이연희 · 문금주 · 권향엽
정진욱 · 임미애 · 채현일
강준현 · 박희승 · 박해철
서영교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 이에 치료·보호 목적 외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·강박하거나, 보건복지부 격리·강박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환자를 병실에 강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지시·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.

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·강박은 신체 제한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로서 비자발적 입원치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.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치료는 정신질환자를 무력화된 존재로 느끼게 하여 회복을

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 치료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령에 격리·강박 지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·정비하여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격리·강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5조제3항·제89조제1항제11호 신설).

또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시 비자발 입원 및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 조사에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제16호·제10조제1항제8호 신설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입원과, 신체적 제한 등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한 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

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비자의 입원 및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
- 제75조제2항 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격리실에서 단독으로 시행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신체적 제한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9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적 제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부과한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</u> <u>반하여 신체적 제한 조치를</u> <u>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자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